



미중 무역갈등과 환율조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금융거시경제학」과 「중국근현대사」강의페어링

배경과 필요성

작년 한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3.3%, 총 수출 의존도는 38.9%로,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중국과 미국의 수출비중은 각각 26%와 14%에 육박하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2의 GDP 비율은 40%가 넘는다. 한국의 G2 수출 비중 또한 40%로 상당히 높은 지분을 차지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크므로, G2의 갈등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G2 양국의 패권다툼은 크게 무역갈등과 환율조작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그것을 방어하는 미국 사이에서 상존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하고 극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연구대상이며, 따라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중국근현대사’로 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여 주며 작년 한 해에도 경제가 성장하였다. 또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국제사회적으로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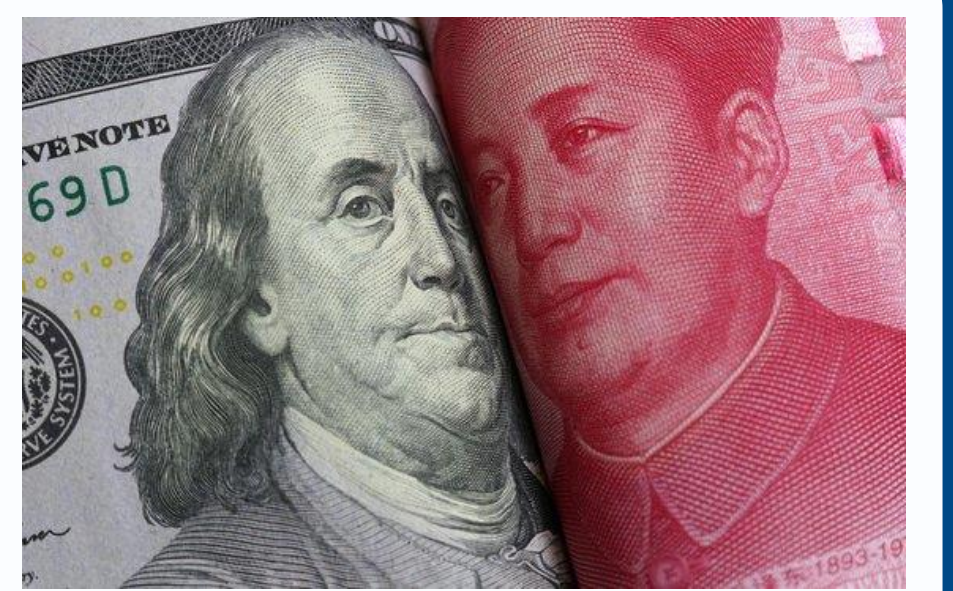
이 배경에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중국을 통괄하는 개념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금융거시경제학’으로 국제 무역과 통화 이론

금융거시경제학의 국제 무역 모델의 가정은 개방 경제를 가정한다. 이때 폐쇄 경제와 달리 GDP 모형의 순자본 유출은 무역수지가 되고, 이는 국제수지로서 대외경제거래제가 된다. 통화 이론에서 통화주의의 입장을 취할 때, 국제수지 불균형과 화폐시장 불균형을 동치로 보아 결국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정부의 환율조정을 통해 무역 흑자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무역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미중 무역갈등과 환율조작 배경과 양상

1. 미중 무역갈등

큰 틀에서 ‘미국 대 중국’은 ‘공정무역 대 자유무역’,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제도로서의 국가 대 존재로서의 국가’의 양상으로 이어져왔다.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을 비판하며,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경계한다. 이는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정부에서 대중 무역 시 관세폭탄을 매기면서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현재 바이든 정부도 큰틀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미국은 반기마다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때 ‘환율 관찰대상국, 환율심층분석대상국, 환율조작국’을 조정하게 된다.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해당국의 외환시장 정부 개입 여부 및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의 조건 중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이 되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 또는 ‘환율심층분석대상’이 된다.

대미 관계의 중국의 의도

경제 전문가들의 중국과 미국의 대립 요인 분석은 다양하다. 그 중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념은 그 대립의 골을 넓히는 요인이 되었다. 이 이론은 그 자체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영역 안에 담겠다’는 모호한 이념으로, 그 핵심엔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우위 독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다툼은 위안화 절하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를 노리거나, 위안화 기축통화를 통한 위안화 범용성 확대 등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정부는 이를 제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폭탄과 같은 제재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환율 의사결정 시스템과 금리 의사결정 시스템 등 관치금융에 가깝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G2간의 갈등 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응방안

이러한 G2간의 장기적 상황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미중 간의 분쟁에서 최대한 반사이익을 취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중국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미국 본국에 대한 직접투자 형태나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현지화를 진행하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2.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등을 이용해 무역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아세안과 관계 확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 주력수출상품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주력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그리고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필요하다.
4. 적극적인 첨단 외국인 기업 유치로 기술전수와 함께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한다.
5.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늘려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해줄 것이다.

참고자료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한과수, 한겨레출판사, 2019
중국의 환율 불균형과 수출성장에 관한 연구, 시미신 이종하, 2020
중국의 무역구조와 국제분업구조에 관한 연구, 박석강 박복재, 2020